



작년말 옥외광고특별법의 시한 만료에 따라 연초부터 이슈화됐던 대체법안 마련이 연내에 해결될 수 있을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애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은 올 상반기에 국회 의결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 대체법안에 대해 기존까지 기금관리를 주관했던 문화관광부가 이견을 내놓아 지난 국회 회기 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됐었다. 문화관광부는 옥외광고기금에 대해 기존대로 전액 국제대회 등의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지난 9월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조정회의에서 협의가 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정부안 확정됐다

기금사용 용도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여수 엑스포를 비롯한 기타 국제대회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사용키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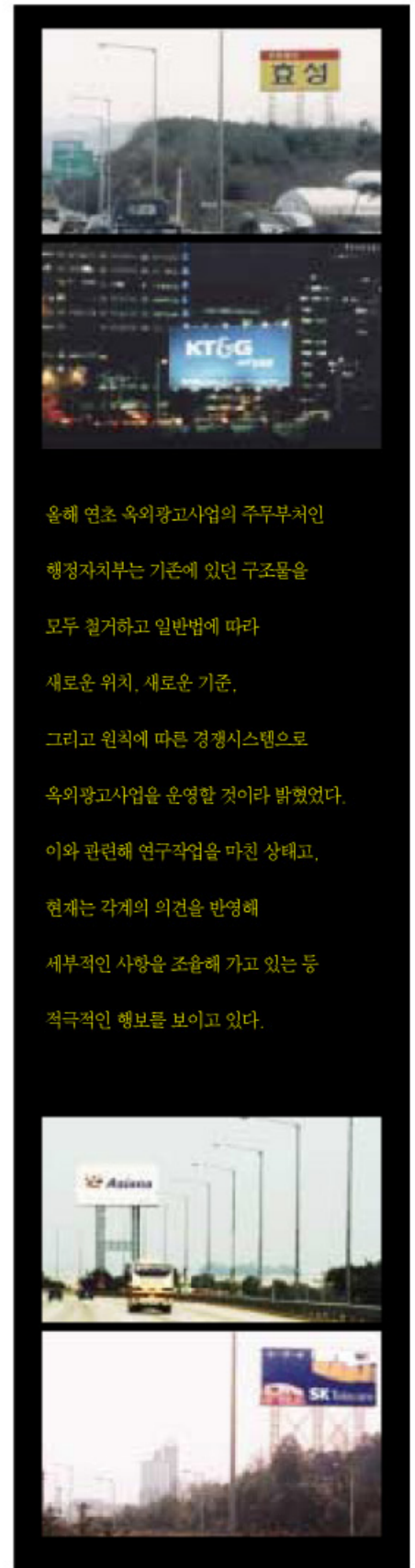
행정자치부 생활여건개선팀 박영운 사무관은“ 정부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체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연초 옥외광고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기존에 있던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고 일반법에 따라 새로운 위치, 새로운

기준, 그리고 원칙에 따른 경쟁시스템으로 옥외광고사업을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구작업을 마친 상태고, 현재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해 가고 있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사무관은“ 10월초부터 바로 옥외광고센터 설립에 대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관계부처는 물론 광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 관계자들을 다 참여시켜서 옥외광고 운영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손봉숙의원실, 연내 국회 의결 확신

작년 10월 이 법안의 대표발의를 했던 국회 손봉숙 의원측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법안의결을 확신하고 있다. 손봉숙 의원실 차세원 보좌관은“ 현재 법안소위원회까지 통과된 상태다. 단 몇 가지 부분의 수정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소 수정이 될 부분은 애초 업계의 반발을 샀던 옥외광고진흥원 설립 등이 삭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 보좌관은“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문광부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행자부로 가져오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이다. 옥외광고는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국제대회가 있을 때는 일부 기금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늦어도 11월까지의 국회 의결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초부터 광고물 철거작업에 들어갔던 도로변 야립광고관들은 반년이상 백지상태로 텅 빈 채 덩그러니 방치돼 왔다. 업계에서는 더 이상 관련법안의 마련을 미룰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분분하다. 그런 가하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연내에 법안 통과가 될지 의문이라는 의견들도 있다. 일부 광고주들은“ 올해는 처음부터 야립광고의 매체운영 계획을 배제시켰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편에서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구조물도 있는데 행자부는 처음 얘기했던 대로 새로운 기준과 관리시스템 아래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기존의 구조물에 다시 옥외광고를 하게 되면 매체사들이 광고금액을 대폭 올려버리는 건 볼 보듯 뻔하다”는 얘기도 있었다.“ 야립같은 경우는 특히 경쟁사 상황에 민감해지는데 경쟁사도 옥외부분에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태라 당분간 보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광고주도 있었다.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일단 현재로서는 법안 확정을 관망하면서 경쟁사를 비롯한 업계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 KAA 취재 | 이수지



올해 연초 옥외광고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기존에 있던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고 일반법에 따라 새로운 위치, 새로운 기준, 그리고 원칙에 따른 경쟁시스템으로 옥외광고사업을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구작업을 마친 상태고, 현재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해 가고 있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